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추진계획

2011. 7. 1.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 목 차 》

I. 추진 경과	1
II. 추진배경 및 시사점	2
III. 추진 방향	4
IV. 추진 과제	5
1. 스마트 인터넷 리터러시 강화	5
2. 스마트 문화조성 범국민운동 확대	10
3. 스마트 인터넷 환경의 자율정화 체계 구축	12
V.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	14
참고 : 부처별 소관 과제 현황	15

I. 추진 경과

-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및 명예훼손 등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건강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필요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를 “건강한 사회 만들기” 실천 과제로 선정 (총리실, '11.2월)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추진을 위하여 방통위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3차례에 걸친 회의('11.2~5월, 총리실 주관)를 통해 추진방향 등 논의
 - * 아인세 추진 관계 부처 : 방통위(주무부처), 행안부, 여가부, 교과부 등 총 4개 부처 참여

- 대통령께서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등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사회 교란 유언비어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철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 강조

〈관련 대통령님 말씀〉

- “사이버 안보와 사회 교란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2011.1.17.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 “일본의 방사능이 넘어 오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인터넷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
“이런 유언비어는 막아야 한다” (2011.3.17.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

II. 추진배경 및 시사점

1 국내 인터넷 이용 환경

□ 스마트폰 등 무선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른 스마트 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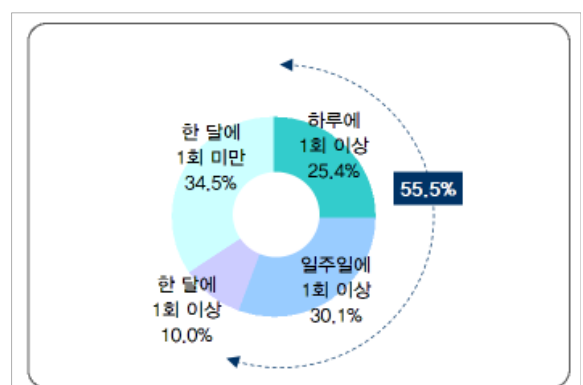
-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약 80%대로 생활 필수재 수준으로 일상화 되었고,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무선 인터넷 이용이 급증,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 조성

- 스마트폰의 확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신규 서비스 이용확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통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 95.9%, 세계 1위(OECD, '11년), 인터넷 이용률 78.8%(KISA, 11년)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추이 : 80만명('09.12)→ 722만명('10.12)→1,002만명('11.3.)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추이 (천명, %)>



<개인용도 SNS 이용 빈도 (%)>

* 출처 : 2010 인터넷이용자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

환경 변화에 따른 시사점

□ 新 인터넷 환경에 따른 새로운 역기능 출현 및 정보격차 심화 우려

- 무선 인터넷 이용확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악성댓글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폭력 현상 증가
 - 스마트폰 및 SNS 등은 기존에 비해 정보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개인의 사생활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치명적 피해 유발 가능
 - * 개인정보침해 989건(50%↑), 및 사이버명예훼손 1,039건(62%↑) (경찰청 '04~5 전년대비증률)
 - **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의 정보 재전송(Retweet)의 50%가 30분내 완료 (소셜컴퓨팅연구소, '11)
- 무선 스마트 환경하에서 연령·소득수준 등에 따른 계층간 정보격차 현상 심화 우려
 - 장애인, 노년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및 정보 활용 능력이 저하되면서 정보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교육 및 지원 강화 필요

□ 새로운 인터넷 환경하에서 기존 심의규제 체계의 개선 요구

- 인터넷을 통한 소통·참여가 증가하면서, 타율적 심의가 아닌 이용자 스스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인식에 따른 자정노력 필요성 대두
- 명예훼손 등 新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적심의 규제의 개선 필요성 제기되면서, 보완방안으로 자율 규제 강화 요구
 - 민간 주도의 자율정화 환경 마련을 위해, 이용자·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책임 의식 제고 필요

시 사 점

新 역기능 대응 및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범국민 운동을 통해 자율적 책임의식에 기반한 자율 정화 환경을 조성, 전 국민이 IT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스마트 문화 선진국」 도약 필요

III. 추진 방향

목 표

스마트 인터넷 문화 선진국 조성



3대
추진
과제

스마트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강화

스마트 문화 조성
범국민 운동 확대

스마트 인터넷 환경
자율정화 체계 구축

세부
추진
사업

- ①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② 소외계층 교육 등 강화
- ③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 ④ 희망(HOPE)운동 전개
- ⑤ 인터넷 윤리 홍보 강화

- ⑥ 사업자 자율규제 추진
- ⑦ 심의체계 및 제도 개선

IV. 추진 과제

1 스마트 인터넷 리터러시 강화

1-1 인터넷 리터러시¹⁾ 및 정보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스마트 인터넷 시대를 맞아 SNS 등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양 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정규 교육 과정 개편 등 리터러시 교육 강화 추진

□ 『SNS 등 신규 인터넷 서비스관련 윤리 교육』 개발 (방통위)

- 최근 급증하고 있는 新역기능 예방을 위해 SNS등 소셜 미디어의 올바른 활용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운영
 - 소셜미디어의 올바른 활용을 주제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 신규 운영
 - * 소셜미디어의 의미와 특징, 올바른 활용 자세 및 UCC제작 등 (30개교)
 - 방과 후 학교로 운영 중인 ‘인터넷윤리교실’에 건강한 소셜미디어 활용 등을 주제로 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 보급 (300개교)

□ 『체험형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신규 개발 (행안부)

- IT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역기능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개발 및 “정보윤리 가족캠프” 신규개발·운영을 통한 실천적 예방교육 추진
 - *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비방, 욕설 등 사이버폭력에 의한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등을 체험자가 가상으로 경험하도록 하여 정보윤리의식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

1) "인터넷 리터러시(Internet Literacy)" : 정보를 창의적으로 검색·평가하고 타인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용하여 창조·활용·소통하는 이용자의 소양을 의미하는 ‘리터러시’를 인터넷에 적용한 개념으로,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은 포괄적인 지식사회에서 사회와의 소통, 지식 습득, 대인활동, 문화향유 등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다.(황용석, AI-IP환경에서 인터넷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정책방향, 2011)

□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편을 통한 학교 정규 교육 추진 (교과부)**

- 초·중 교과서의 윤리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학교 정규 교육을 통한 정보윤리교육 추진
 - '09~'10년에 걸쳐 개발·검정한 초5·6, 중2, 고1 대상 교과서를 '11년부터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
 - 중3, 고2 대상 교과서 검정을 추진, '12년 적용에 대비

□ **교원 연수교육(오프라인) 대상 확대 (방통위, 행안부, 여가부)**

- 교육리더의 인터넷 윤리 교육 중요성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존 초·중등 교원에서 장학관, 교장 등(60명)까지 연수대상 확대
- 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지도를 위해 유치원 교사(525명) 및 유치원 파견 전문 강사(20명) 교육 신규 실시
 - * 취학 전 아동의 건전매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직무연수 지속 실시(6,000명)

□ **온라인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강화 (방통위, 행안부)**

-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원격 교원 직무연수 활성화를 통한 교원의 교육기회 확대
 - 온라인 정보화 사이트인 '배움나라'(www.estudy.or.kr) 원격연수원을 통한 상시 온라인 교원 직무연수과정 확대 운영
 - * 인터넷중독, 개인정보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올바른 정보이용법 관련 온라인 직무연수 시행(4,000명)
 - * 효율적인 인터넷 윤리 교육을 위한 교과부 인증교원 원격연수 프로그램 운영 (1,500명)

□ '장애인 및 노년층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행정부

○ 장애인·노년층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사업인 「다함께@넷세상」 추진

- 장애청소년 인터넷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보완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초·중·고 10개교 특수학급)
 - * 인터넷 역기능 예방법, 해킹 및 바이러스 등 안전한 인터넷 활용법 등에 대한 장애 수준별 교재 개발
- 노인복지회관 등의 ICT 관련 교육과 연계, 노년층 대상 인터넷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 * 노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단기 인터넷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한국 복지정보통신협의회' 등 고령층 정보화교육과 연계 추진

○ 장애인 및 노년층 대상 인터넷 방문 교육 및 지원 사업 강화

- 10인 이상 장애인 및 노인 모임·단체에 전문 강사의 방문교육 실시
 - * 무선인터넷 관련 기초지식 및 주요 기능 활용방법
-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시설 대상 정보윤리교육 지원 강화
 - * 장애유형별 정보화역기능 취약분야 발굴, 맞춤형 방문 교육 실시
-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등 보급 및 복지시설내 무료 무선랜(WiFi) 구축 추진
 - * WiFi존 총 58개 구축('11.5월 현재) 및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총 7천대 보급('10년)

- ◇ 미래 사회의 건강한 인터넷 문화 시민 양성을 위해 인터넷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생애주기별 인터넷 리터러시 소양 교육 추진

□ '유아' 대상 조기 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방통위, 행안부, 여가부)

- 전국 유치원 대상 유아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 '바른 인터넷 유치원'으로 선정된 유치원(525개) 교사 및 '시범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유치원'(50개) 파견 유아 전문 강사 교육 실시
 - * 영역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 스마트 키즈 2만명 교육 목표
 - 취학전 아동의 건전 매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직무 연수 확대 실시

□ '청소년' 대상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통위, 행안부, 교과부)

- 초·중·고 정규 수업 및 재량활동 등과 연계한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
 - 기존 인터넷윤리교실,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외 '창의적 체험활동' 신규 추진 (초·중·고 50개교, 1,500명)
 - *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교과부의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에 따라 창의·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올해 신설된 비교과 수업
 - 정규수업과 연계한 기존 '정보윤리교육'외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재 및 동영상 자료 등 콘텐츠 추가 개발·보급
 - * 청소년 정보윤리교육에 필요한 사례중심의 표준교안(주제별 PT, 영상물 등) 개발 보급
- 사이버 일탈 행위 가능성이 높은 위기 청소년(소년원생 등)을 대상으로 정보윤리 특별교육 시범 실시
 - * 서울소년원생(100명)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 추진

□ '학부모 등 성인' 대상 교육 확대 (방통위, 행안부, 교과부, 여가부)

○ 가정 내 부모의 자녀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과정 확대

-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방법과 인터넷에서의 사생활침해 예방, 명예훼손 예방 등 사이버권리 보호방안 교육

* '인터넷윤리 순회강연'과 연계한 학부모 특강 운영, '학부모 정보윤리 아카데미' 개설·운영 및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학부모단체와 연계한 인터넷윤리 교육 실시

○ 지역주민 대상 정보윤리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교육기관(63개)을 선정, 지역주민(4만명) 대상으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대처방안 교육

- 지역구청, 육군정보통신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성인대상 인터넷윤리에 관한 동영상 교육 실시

* 송파구청(300명), 강남구청(500명), 육군정보통신학교(2,000명) 등

2 스마트 문화조성 범국민운동 확대

2-1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범국민 캠페인 전개

◇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 간 협력 기반의 공동 캠페인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민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스마트 희망(HOPE) 운동」 전개 (방통위, 행안부, 여가부)

- 부처별 민·관 협의체를 활용, 인터넷상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파하고, 건전한 문화의 희망을 확산하는 「스마트 희망(HOPE) 운동」 전개
 - * HOPE(희망)는 ‘Heart-On-Project-Evangelist(전파자)’의 약자로, Heart-On은 ‘인터넷 이용시 배려와 이해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자’는 슬로건임
- 민·관 협의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선플 릴레이 등 실천적 문화 운동의 공동 추진 등 시너지 효과 제고
 - * 부처별 민관 협의체 현황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범국민협의회』 (64개 기관), 『따뜻한 디지털세상 실천 네트워크』 (31개 기관), 『청소년 건전인터넷 문화조성 국민운동본부』 (85개 기관)
- 캠페인의 인지도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회적 귀감이 되는 저명인사 및 악성댓글 피해 연예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 홍보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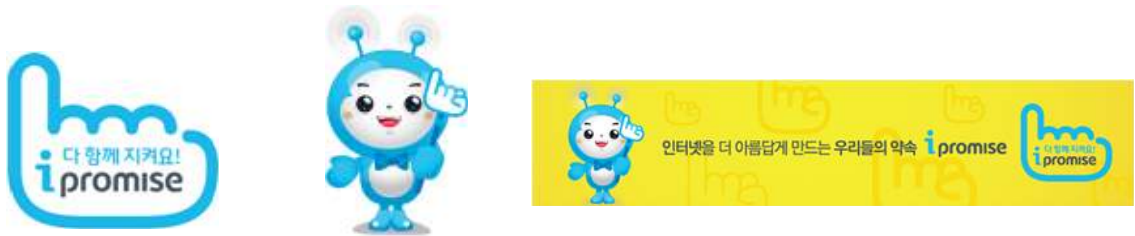
□ 인터넷 윤리 관련 청소년 동아리 육성 강화 (방통위, 행안부, 여가부)

- 차세대 인터넷 리더를 육성하고, 미래 정보사회를 선도할 인터넷 윤리 관련 청소년 단체의 가입 대상 및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인터넷 유해환경 대응능력 배양
 - * 『한국인터넷드림단』 (282개교, 2,853명), 『아름누리 지킴이』 (203개교, 6,762명), 『청소년스스로지킴이(Youth Patrol)』 연구학교(44개교) 및 동아리 활동(230여개) 지원

- ◇ 전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인터넷윤리 브랜드 신규 개발 및 홍보 매체 다변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강화

□ 전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인터넷 윤리 브랜드 신규 개발 (방통위)

- 효율성 있는 인터넷 윤리 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인터넷 윤리 관련 캐릭터, 로고, 슬로건 및 배너 등을 신규 제작, 배포



□ 대국민 인식 강화를 위한 홍보 매체 다변화 추진 (방통위)

- 극장, 포털사이트, IPTV 등 신규 홍보매체 개발 등 홍보 매체 다변화를 통한 인터넷 윤리 홍보 추진
- 인터넷윤리 공익광고를 광고 효과 및 주목도가 높은 극장 방영 추진
 - * 제작된 공익광고는 주요 인터넷 포털, 지하철, 전광판 등에 연계 활용, 광고효과 강화
 - 포털사이트 내 인터넷 윤리 페이지 구축 및 가정 및 학교 등에 보급된 IPTV를 통한 인터넷 윤리 교육·홍보물 송출 등

□ 인터넷 윤리 주제 홍보를 위한 관련 행사 확대 (방통위)

- '인터넷 윤리대전'('08년부터 개최) 등 인터넷 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공모 행사의 출품 부문을 확대하고,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총리상 신설
- * 표어·포스터·UCC 외에 '유아 그림' 부문을 신설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물로 제작하여, 각종 관련 행사에 활용

3 스마트 인터넷 환경의 자율정화 체계 구축

3-1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자율규제 추진

◇ 스마트 인터넷 시대 하에서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감 제고를 통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유도

□ 민간 사업자 주도의 자율적 규제 환경 조성 (방통위, 행안부)

- 포털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인터넷 자율규제 선포식(11.8월)” 개최 등 「2011년 인터넷 자율규제 원년」 추진
 - 음란, 청소년유해정보, 사행행위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
 - * 사업자 협의를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마련 추진 중
 - 불건전 정보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 서비스제공자의 자율이행 유도

3-2 신속한 심의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 음란, 도박, 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신 심의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추진

□ 통신 심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소위원회)의 심의 주기 단축(주1회→주2회) 또는 임시회의 활성화 추진
- 신속한 불법유해 정보 확인을 위해 심의위 수작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추진

□ **불법유해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심의활동 등 강화 (방통위, 여가부)**

- 음란, 선정, 사행심 조장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분야별 집중 기획모니터링 실시
 - * 신·변종 불건전 영업(키스방 등) 관련 인터넷 사이트 차단 등 집중 기획 심의
- 포털 및 인터넷 신문 등의 유해성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추진
- 해외 유입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를 위해 현행 차단장비로 차단이 되지 않는 암호화 통신 등 우회접속에 대한 신규 차단기술 개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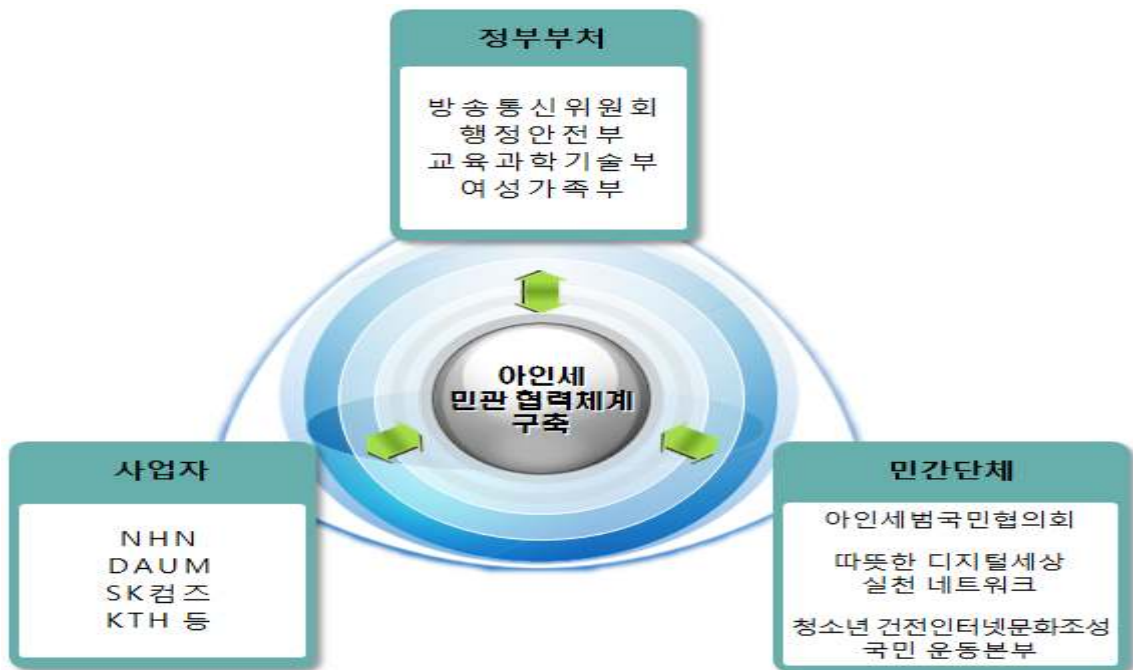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터링 기술 이용 활성화 (방통위)**

- 불법유해정보 사이트 자동 수집·분류를 통해 음란·선정 등 신규 유해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실시
- 그린i-Net을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무료보급 확대 및 기 보급된 S/W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유해정보 차단의 실효성 제고
 - * 추진실적 : 내용등급 DB 119,369건 업데이트('03년 ~ 누적 710,863건 DB 구축), 내용선별 S/W 569,326건 다운로드('03년 ~ 누적 3,622,083건 보급)

V.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

□ 추진체계

-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협력 강화
 - 스마트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단발성 행사가 아닌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범국민 참여형 캠페인 강화
 -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범국민협의회』, 『따뜻한 디지털세상 실천 네트워크』, 『청소년 건전인터넷 문화조성 국민운동본부』 등 부처별 민간협의체간 협력 강화
 -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 사업자,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상 지속적인 연중 범국민 운동 전개



□ 향후 계획

- 각 부처별 세부 사업 추진 (~12월까지)
- '11년 추진실적 평가 및 '12년 추진계획 수립 (12월~)

참 고

부처별 소관 과제 현황

구분	추진 과제	주관 부처	
스마트 인터넷 리터러시 강화	1-1 인터넷 리터러시 및 정보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SNS 등 신규 인터넷 서비스관련 윤리교육 개발 - 소셜미디어 활용 및 윤리의식 제고 교육프로그램 신설	방통위	
	○ 체험형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신규 개발 -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체험교육프로그램 - 정보윤리 가족 캠프 신규 개발	행안부	
	○ 학교 정규 교육을 통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 초·중등 교과용 도서에 정보윤리 내용 강화	교과부	
	○ 교원연수교육(오프라인) 대상 확대 - 교원연수 대상 확대 -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파견 전문강사 교육 실시	방통위, 행안부, 여가부	
	○ 온라인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강화 - 온라인 교원 직무연수 운영	방통위, 행안부	
	1-2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 장애인 및 노년층 등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다함께@넷세상」 교육사업 추진 - 인터넷 방문교육 및 지원사업 강화	방통위, 행안부	
	1-3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유아 대상 조기 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 - 유아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방통위, 행안부 여가부	
	○ 청소년 대상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정규 수업 및 재량활동 연계의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 - 위기 청소년 대상 정보윤리 특별교육 실시	방통위, 행안부 교과부	
	○ 학부모 등 성인 대상 교육 확대 - 학부모 교육 과정 확대 - 지역주민 대상 정보윤리교육 강화	방통위, 행안부 교과부, 여가부	
	스마트 문화조성 범국민운동 확대	2-1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범국민 캠페인 확대	
		○ 민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스마트 희망(HOPE) 운동」 전개 - 「범국민 스마트 희망(HOPE) 운동」 전개	방통위, 행안부 여가부
○ 인터넷 윤리 관련 청소년 동아리 육성 강화 - 청소년 단체 가입대상 및 활동 강화		방통위, 행안부 여가부	
2-2 범국민 인식 확대를 위한 인터넷 윤리 홍보 강화			
○ 윤리 브랜드 신규 개발 ○ 홍보 매체 다변화 추진 ○ 인터넷 윤리 주제 홍보를 위한 관련 행사 확대		방통위	
스마트 인터넷 환경의 자율정화 체계 구축		3-1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자율규제 추진	
	○ 민간 사업자 주도의 자율적 규제환경 조성 - 「2011년 인터넷 자율규제 원년」 추진 - 관리적·기술적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방통위, 행안부	
	3-2 신속한 심의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 통신심의 시스템 및 제도 개선 ○ 불법유해정보 상시모니터링 및 심의활동 강화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터링 기술 이용 활성화	방통위, 여가부	